

민주·尹, 강대강 대치 법안 '줄줄이' 대기

'충돌 악순환' 예고

민주 직회부한 양곡법 개정안,尹이 '거부' 간호법·의료법·노란봉투법·방송법 등 다수 향후 본회의 통과마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충돌할 수 있는 대치 법안이 줄줄이 있어 양 측간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로 간호법·의료법·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또 노란봉투법도 직회부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 법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 야당과 윤 대통령의 강대강 대치가 악순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직회부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향후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게 됨으로써 막혀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 직회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인건) 등의 대응을 이어나갈 태세다. 이에 향후 양측 대립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4일) 거부권 행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하고 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고심과 결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업을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과 농업을 재구조화해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자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양곡법은 정부 목표에도 반하고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다. 40개 농민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지금도 정부의 재량 매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기밀 건 재의요구권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대통령실 대응이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행사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결정을 비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이라며 "그 법(양곡법 개정안)이 절차도 문제지만 내용도 국가 재정과 농업 붕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 상황을 두고 민주당이 다시 협상을 해오면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대표권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법률안이 확정된다. 이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불가하다. 부결될 경우에는 그대로 법률안이 폐기된다.

민주당에선 양곡법 개정안이 쌀값 정상화와 농민 민심이 반영됐다는

점을 근거로 범여권에서의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기대하며 법적 절차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무리 야대역소 형국이지만 가결 200표를 모으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앞선다.

문제는 이러한 대립이 앞으로도 수차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외에도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송금법 개정안 등을 직회부로 처리했다. 이에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의 보고 또는 상정을 앞둔 상황이다.

다른 법안들 처리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에서의 재의결 흐름이 반복되면 양측 충돌은 불가피하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직회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자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정하고 기준을 잡지는 않는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평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는 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의회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은 원칙이라 생각한다"고 보았다.

직회부나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대화와 타협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무어했든 윤 대통령의 나머지 법안들도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행해 일방 통과시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뉴스시스



투표소 분위기 한산 4·5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5일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가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준병 의원, 뉴스핌 선정 '제1회 다산의정대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식에서 뉴스핌이 선정한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제1회 뉴스핌 '다산의정대상'은 현재 한국사회의 발전과 화합 및 규제개혁·일자리 창출·사회적약자 보호·지역균형발전·복지·의료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영역을 선정해 이 영역에서 뛰어난 의정 활동을 한 의원들을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수상자(사회적약자 보호 부문)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제2대 국회 등원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롯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산업 재해 예방·청년세대와 장애인 및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준병 의원은 "국회에 들어와 사회적약자 보호와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부분들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노력하라는 체적으로 받아들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유·김태환 기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법인·소득세 100% 감면

국토부·새만금청,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새만금투자진흥지구가 법인세 제로(Zero)를 이어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기업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를 신속히 도입해 기업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지원혜택을 군산·김제·부안 내 새만금사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에서 위임받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조건과 지정절차를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산업·연구·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 광주 투자진흥지구(관광, 문화 중심)보다 대사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대상업종은 국내 산업분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물론 연구개발업, 관광업 등 대부분의 산업을 포함해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등 제조기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업체, 테마파크 등 관광사업자와 같은 새만금 투자기업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는 상황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요청해 지정하는 방식 외에 청에서 직권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도입했으며, 신청 후 처리기한을 법령으로 정해 요청부터 지정까지 절차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세제혜택이 조속히 제공되도록 새만금사업법 시행(6월 28일 시행) 즉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새만금산업단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맺은 입주계약 54건 중 25건이 2022년, 2023년에 이뤄졌으며, 올해는 1분기 만에 작년 한 해 투자금액을 달성할 정도로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에 달려 있는 만큼 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해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또는 통합 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민주, "일본 국민도 이해 못하는 오염수 방류, 우리만 이해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시도 관련 "일본 국민도 이해 못하는 걸 우리 국민만 이해하란 거냐"고 비판했다.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일본 측 여론을 소개하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국민도 납득하지 못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이해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제의 민간 업체를 선정했다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업체 선정 이유와 절차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조차 못 듣고 있다"고 했다.

또 "후쿠시마 규모 대형 원전 사고 처리 경험이 있는 민간 업체는 세계적

으로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히게 사 실이면 누가 어떻게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겠냐"고 비꼰다.

권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국내의 부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부터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방침"이라며 "피험자 환경오염 방침은 당사 철회 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